

# “현안해결, 통 큰 초당적 협력 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부동산·선거제도 등 언급



정동영(사진) 민주평화당 대표가 여야를 향해 부동산,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이것이 우리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문화상 국회의장이 초청한 5당 대표 회동에서 통 큰 정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소소한 당리당략을 초월해 역사에 남는 일을 성취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뜨거운 현안들에 대해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발전 등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가 폭등 현상에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왜 내 집 마련의 꿈도 꿀 수 없게 됐나’라고 절규한다. 당연한 꿈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든 이 나라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상한제 폐지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강서구 발산자구를 개발하면서 분양가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근본대책 3종 세트를 실행했다. 실제 발산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 뒤늦게 참여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분양가가 공개

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했고 이후 부동산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가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 분양가가 공개는 국민의 85%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있는 분양가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일본의 차지차기법을 제시하며 “일본에는 100년 넘은 우동집, 신술집, 과거가게 등이 2년개가 넘는다. 이제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때가 됐다.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공중폭발 사건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주택은 계약기간 2년에 1회 연장이 전무다.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있다. 지역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국회는 그것도 처리 못하고 있다.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난날 당 대표 취임 일성으로 내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70년 된 낡은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의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고쳤다.

정 대표는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 최근 10년 취업제한 금융권 등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106명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은 3년간 금지

최근 10년간 취업제한 기관인 금융권 등으로 재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6명에 달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106명 퇴직간부가 금융권 등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는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사에 취업한 뒤 금감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고 의원실에서 재취업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6명 중 65명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금융유관 취업자는 12명으로 이들을 합하면 73%가 금융업

권에 재취업한 셈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부분 소속기관인 금감원 의견을 수용한다. 현재 퇴직간부들이 취업 심사를 받으려면 소속기관에 취업 예정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요청한다. 그러면 해당기관장은 직무관련성을 판단한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 즉 취업제한 심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의 의견서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집중적으로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면서 “당시 저축은행들이 부실을 은폐하고 금감원 검사를 막기 위해 고위간부들을 집중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식품클러스터기업 조세감면 추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식품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사진)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식품관련 기업에게 세계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남북이 기초적인 신뢰구축 단계를 넘어, 군사력 현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상호 감시하고 적대행위와 위협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 남북, 초보적 수준 ‘운용적 준비통제’ 시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울안보대화 개최식 기조연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남북이 초기단계인 ‘군사적 신뢰구축’을 넘어,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준비통제’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SDD)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 계기에 남북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그동안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 시설을 철거하고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한편,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남북이 기초적인 신뢰구축 단계를 넘어, 군사력 현황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면서 상호 감시하고 적대행위와 위협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 한 것이다. 정 실장은 먼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전제이자 환경이다. 남북 간 긴장완화는 북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8월과 7월 두 차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전을 봤다”며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명실상부한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경비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 등 구체적 조치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

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와 함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남북은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준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이제 님새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 대화와 노력들이 하나로 모여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특사단에게 자신이 내린 비핵화 결정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스스로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